

# 光州日邦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 222 —8111 kwangju.co.kr 제20645호 1판 (음력 10월 27일)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 목포 신항만 폐쇄 위기

## 해수부, 자동차부두 사용료 30% 감면 내년부터 전면 폐지기아차 등 물량 다른 항만 이전 검토…목포시·전남도 반발

목포 신항만이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해양수산부가 그동안 감면해주던 자동차 부두 사용료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할 방침 이기 때문이다.

사용료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 기아자동 차를 비롯한 화주와 선사 등은 자동차 물 량을 다른 항만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목포 신항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3일 전남도와 목포시에 따르면 해수부는 목포 신항 다목적부두(MIRT) 활성화를 위 해 그동안 시행해오던 항만시설 사용료 30% 감면 혜택을 내년 1월부터 폐지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지난 4일 감면율 조정자문위 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원회에서는 목포 신항뿐 만 아니라 광양항 등 6개 항만의 시설사용 료 감면 혜택을 20~30%가량 줄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이같은 감 면 축소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말 고시할 예정이다.

해수부의 목포 신항 감면율 폐지 방침은 자동차부두 사용료 감면율이 없는 다른 항만들이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4년 개항한 목포 신항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외항선의 선박 입출항료, 선박 정박료, 화물 입출항료를 초기 100% 감면 받다가 2010년 75%, 2011년 50%, 2016년부터 30%씩 감면 받아왔다. 이에 따라신항 물동량의 60~70%를 차지하는 자동차 물량에도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자동차 운반선 감면 적용은 신항이 유일했다.

이같은 혜택에 따라 신항의 물동량의 자 동차 비중은 2014년 56.7%에서 2015년 61%, 2016년 64.3%, 올해 9월까지 79.6% 로 높아졌다. 신항 운영은 자동차 물량이

절대적인 셈이다.

목포시와 전남도, 화주와 선사 등 관련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동차에만 집중돼 있는 목포 신항의 특성을 고려하 지 않고 감면 혜택을 폐지하면, 자동차 물 량이 다른 항만으로 이탈하고, 결국 신항 은 폐쇄 위기에 놓인다는 것이다.

특히 환적물량 이탈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적물량을 취급하는 선사 관계 자는 "서사이 경우 수배마워이 이익을 놓 고도 영업을 한다"면서 "수억원대인 감면 율은 항만 선택의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물량과의 감면율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20년 된 항만 컨테이너부두는 70%를 감면하는데 2년 밖에 되지 않은 목포 신항 자동차부두의 감면율 폐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다른 항만의 경우 주력인 컨테이너와 국제 카페리등 감면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출자동차 화물유치를 위한 유관기관(전남도, 목포시, 목포지방해수청,목포세관) 공동시행 협약서에 시설사용료 30% 감면을 2019년 12월까지 유지한다는 밝혔는데 이를 뒤집었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또 정보가 약소을 내

팽개쳤다고 비난했다. 목포 신항에 세월호를 거치할 당시 정부는 '신항 적극 지원'을 약속해놓고, 유족들이 떠나자 오히려 신항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목포항 예선협회 관계자는 "신항은 다른 대체 화물이 없고 세월호로 직접적인물류 피해도 입었다"며 "세월호 피해를명분으로 해서라도 감면율을 잠정 유지해야한다"고말했다.

목포시는 감면율 폐지는 항만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는 "목 포항 활성화를 위해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 자동차 물량을 유치했는데, 해수부가 찬 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모파=건주선기자 kis0533@

#### 5·18 특별법 연내 처리 무산

한국당, 국방위 통과 막아 … 내년 2월 처리도 쉽지 않을 듯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지 못 했다. 〈관련기사 3면〉

5·18진상규명 특별법안은 이날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 안건에는 상정됐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결 전 공청회 개최'를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결국 의결 되지 못했다. 이로써 5·18진상규명 특별 법안의 연내처리는 무산됐고 일정이 확 정되지 않은 공청회 개최 후 내년 2월 임 시국회를 기약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이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며 법안 의결에 반대한 것은 이틀 전 국방위 법안소위 여야 합의사항을 뒤 지은 것이다. 지난 11의 박 개최되 국박 위 법안소위(소위원장 한국당 경대수)에서 여야는 민주당 이개호, 국민의당 김동철·최경환 의원 등이 발의한 5·18 진상규명 관련 법안 4개를 한데 모으고 일부 조항을 덜어내는 등 격론을 벌인후 '공청회를 열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

그러나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 국당 의원들은 '두 법안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만 드는 것인 만큼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 정회부터 열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며 법안 의결을 막아섰다. 전체회의에 함께 상정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민주당 이철희 의원 발 의)' 역시 한국당 측이 공청회 개최를 요 구하면서 이날 국방위 통과가 무산됐다.

국방위 산회 후 5·18특별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 및 처리 시점에 대해 김동 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국방위원)는 광 주일보와 통화에서 "한국당이 법안 내 용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므로 공청회 를 서둘러 개최한다면 내년 2월 임시회 에는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 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철희 의원 (민주당 국방위 간사)은 "표면적으로 한 국당이 법안 제정 절차를 문제삼았지만, 실제로는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반대, 정치 상황의 변 화 등을 고려하면 내년 2월 임시회 처리 역시 만만치 않다"고 내다봤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연말 대리운전 부르는 게 값 ▶6면 그림 편지 - 이이남 '린츠' ▶18면



KIA 골든글러브 5개 받았다 ▶20면



www.kwangshin.ac.kr



문재인 대통령 중국 의장대 사열 중국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중국 베이징 수도공항에 도착, 중국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 안철수 "바른정당, 한국당과 통합 추진하면 국민의당과 통합은 없다"

#### 광주일보와 인터뷰서 밝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둘러싼 당내 갈등 확산에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호남과 영남에 이어 다음 주에는 대전·충청, 강원을 방문하는 등 전국적인 여론 수렴을 마치고 모든 의견들을 담을 수 있는 (통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연초에는 전격적으로 통합

선언에 나서지 않느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인터뷰 5면〉

하지만, 호남 국회의원들이 바른정당과 의 통합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설익은 '통 합 선언'이 사실상 '분당 선언'으로 이어지 지 않느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이뤄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 대표는 "호 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자유 한국당, 통합 정당의 3자 구도를 만들어야 지방선거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바른정 당과의 통합은 국민의당이 생존할 수 있 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다만 호남에서는 바른정당 과의 통합이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 이러한 시각차 를 좁히고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과의 '선거 연대 이후 통합론' 에 대해 안 대표는 "호남을 제외한 전국의 출마자들이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들을 동시에 선출하는 지방선거 특성상 선 거연대로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저도 그분들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선거연대를 넘어 통합을 추진해야 하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안 대표는 바른정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유하국당과의 단계적 통합론과 관련.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바른 정당이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추진한다면 국민의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어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반 자 유한국당 연합이며 자유한국당을 극우보 수 정당으로 만들 마지막 기회이자 실질적 인 정치 개혁"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호남 의원들의 반발 등 분당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안 대표는 "분당은 안 될 것이라고 본다. 누구도 분당을 바라지 않는다"며 "최대한 분열이 없도록설득하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고 방법을 젖을 것 이라고 밝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iu.co.kr

